

보수양당독재 타도! 민중권력 생체! 헬조선 변혁!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2025년 4월 26일

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윤석열 탄핵 이후 정치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서 끌려내려왔다고 하여 마냥 환호할 일도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다름없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구속되지도 않았고, 법에 정해진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한 내란동조세력이 국가기구의 요직에 그대로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광훈 같은 사이비 종교세력들이 여전히 대중을 동원하여 극우정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한 한덕수도 대통령에 출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다가오는 6.3 대통령선거에 누가 뽑힐지 오리무중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대선일 이전에 이 재판이 고법으로 파기환송되거나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윤석열 퇴진 투쟁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친민주당 사회정치세력은 12.3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꾸리고 윤석열 퇴진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윤석열 퇴진투쟁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투쟁의 길 즉 위력으로 윤석열을 즉시 하야시키는 ‘민중항쟁의 길’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하에 국가기구를 통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절제된 대응의 길 즉 ‘탄핵의 길’을 걸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윤석열 내란세력과 노동자·민중 간의 치열한 계급간 투쟁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 세력과 국힘당 세력 간의 말만 요란한 정파간 투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척결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3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당선된다 해도 정치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과연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구 안팎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수구보수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청산처럼 한다면 뿌리는 뽑지 못하고 극히 일부 인사를 자리에서 추방하고 감옥에 보내는 데 그칠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는 더욱 격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미지근한 내란청산 따위가 아니라 화끈한 민중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돌아가며 권력을 차지해온 보수 양당이 아니라 그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을 차지하고 행사하는 혁명, 갑오년 동학혁명과 같은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야당을 자부합니다. 전통야당이란 무엇입니까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야당으로서 권력의 일부를 누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여러 차례 집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중도보수 정당이며, 수구보수 정당과 적당히 대립·적대하면서 공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입니다. 이들은 수구보수 세력과 한 쌍을 이루지 않고는 결코 노동자·민중을 배제한 채 현재의 권력 독과점을 누리질 못합니다.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결코 내란세력을 척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넘어 87년 체제 해체, 보수양당 독재 타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하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중권력 수립으로 나아가야 합니

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란세력이 척결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윤석열이 축출되었음도 우리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구체적으로 행정권력과 국가대권을 여전히 수구보수 정치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6.3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민주당은 현 사회경제 질서를 변혁하려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정당입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질서는 크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입니다. 돈을 가진 자본가가 돈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려먹는 질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여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는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이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경제 질서는 극소수의 재벌이 군림하는 천민자본주의 체제입니다. 4대재벌이니 10대재벌이니 하는 거대재벌에다 전경련(이미지가 나빠서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꾼)에 가입한 군소재벌까지 합하면 한국경제는 재벌이 다 요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재벌지배 사회경제 질서,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을 뜻합니다. 이 천민자본주의 질서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사회를 부자와 빈자로 더욱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회지표가 세계 최악인 헬조선입니다. 이런 질서는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광화문을 지나다 보면 태극기부대가 적어놓은 구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반대이고, 둘은 연방제 통일에 대한 반대이고, 셋은 재벌(대기업)해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만큼 수구보수세력, 극우세력은 재벌해체에 대해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는 재벌체제 해체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에서는 재벌 규제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재벌에 대해서는 입도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재벌을 해체하느니 규제하느니 했다가는 권력을 얻기도 보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되어도, 민주당이 집권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권역이 매우 심각한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 전체가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관세 압박은 미국경제가 극심한 쇠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온 비상대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교역량을 축소시키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수출을 심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20일 대미수출이 14.3%나 감소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내수가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마저 막히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경제로부터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파탄이 난 민생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구보수와 중도보수 두 정치세력은 자기가 집권하면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뺨을 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들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탄나 있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구할 방도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살린다고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 분배의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감질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 여러분! 윤석열 퇴진에 멈추지 말고, 민주당 집권에 목매달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길로 펼쳐나갑시다.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제7공화국 민중헌법 제정과 새 헌법에 의거한 민중권력 쟁취로, 그리고 민중권력에 의거한 천민자본주의 파쇼 체제 변혁으로 계속 밀고나갑시다. 이것은 민주당의 '빛의 혁명'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전자는 가짜 혁명이고 후자는 진짜 혁명입니다.

헬조선 변혁 10대 투쟁 과제

하나. 독점재벌 완전 해체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재벌은 그 자체가 불법 기업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은 이런 불법으로 나라의 경제적 부를 소수의 손에 집중함으로써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 경제력으로 사회권력과 정치권력까지 좌우하여 한국사회를 재벌과두제 사회로 만들어 양극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점재벌은 신자유주의를 무제한적으로 관철시켜 대자본과 중소·영세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 간 양극화와 정규·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빚어내고 있다. 이것이 대학서열화와 입시과열을 낳고, 사교육병을 낳고,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재벌개혁은 답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재벌개혁을 한다며 상호출자·순환출자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로 대체했다. 그러나 문어발식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소유·지배하는 재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재벌체제 해체는 재벌해체가 아니다: 문어발식 기업집단은 그냥 둔 채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경영만 배제하지는 재벌체제 해체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보았듯이 총수일가가 대주주로서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 2차대전 이후 미국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는 차원에서 전범 기업인 재벌을 해체했던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소급입법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을 전액 환수하며, 재벌 총수 일가족이 관련기업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게 못 박아야 한다.

둘.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은 물론 어떠한 노동자도 배제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주40시간제의 경우와 같이 이런저런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붙여 원래 정한 기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금한다. 법정 근로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한

다.(숨방망이 처벌 근절)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도입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탄력근로제, 계약직 보호법 등을 철폐한다. 선진국에 조응하게 법정 근로기준을 상향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노조없는 사업장 노동자에게 단결의 자유를 보장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선파업 후교섭을 보장한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무노동무임금제를 폐지한다. 비공인 파업 금지를 폐지한다. 파업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을 배제한다. 공무원과 교사, 소방관과 경찰에게도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타 파업의 자유를 봉쇄·무력화하는 노조법상 독소조항 일체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완전 철폐하고 노동보호입법을 새로 제정한다.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기업규모 간, 고용형태 간 노동조건 및 임금 격차를 타파하여 모든 노동자가 격차와 차별 없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의 실 노동시간을 주40시간제로 단축하고(주52시간제 금지!) 빠른 시일 내에 주30시간제로 단축한다. 휴가 기간을 최저 연 30일 수준으로 연장한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간병휴가제를 실시한다. 육체노동자에게도 안식년을 제공한다.

셋. 주택 재분배/택지 국유화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

▲주택 재분배: 많은 국민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여 고생하는 원인은 주택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주거빈곤 문제는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답이 아니고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소유로부터 실거주자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몰 수하여 실거주자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야 한다.

- ▲ 높은 집값의 원인은 높은 땅값이므로 택지는 국유화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주택 거래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기관이 관장 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참조하자! 초저출산율의 주된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다. 국가소멸을 면하고자 한다면 이런 혁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넷. 기초연금 월100만원으로 노인빈곤 타파

- ▲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 이라고도 국가인권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노인학대다.
- ▲ 노인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을 타파하려면 국민연금 개혁 타령만 하지 말고 노인기초연금을 지금 즉시 월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다섯. 보육에서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전면 국영화와 무상화

- ▲ 교육의 이념부터 재설계 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본을 위한 인재 육성이나 노동력 양성이, 또는 명문대 입학 통한 출세와 성공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인간성 자체, 인간 존엄성의 해방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 ▲ 이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은 사적 영리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영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보육)과 평생교육도 포함된다.

여섯. 예방에서 치료까지 보건의료 국영화와 무상화

- ▲ 보건의료의 중점을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돈 되는 의료보다 필수의료가 우선돼야 한다. 의료가 이렇게 바뀌려면 최근 의료대란에서 보았듯이 의료계 전반이 혁명적으로 변혁돼야 한다. 병원도 의사들도 나아가 자식을 의사 만들려는 학부모들도 모두 의료에 대한 관점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 병원,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은 국영화되고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국영화·무상화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을 참조하자!

일곱. 자본주의 기업농(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금지와 소농 우대. 농업·농촌 공동체성 보호와 육성

- ▲ 농업은 양극화하여 대농 위주로 변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소농을 보호하기보다 자본가적 기업농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또 농촌소멸을 재촉한다. 농업의 자본제화는 금지돼야 한다. 소농을 우대하고 농업과 농촌에 공동체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여덟.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민주악법철폐와 국가폭압기구 해체

- ▲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를 집행하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 이번 내란사태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억압기구들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판사·검사, 경찰청장, 검사장, 법원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아홉. 제헌의회 소집으로 민중헌법 제정과 제7공화국 건설

- ▲ 현행 헌법대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헌으로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 민중이 주도하는 제헌으로 민중헌법을 제정해야만 참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 ▲ 민중의 주도하에 개헌 아닌 제헌을 하려면 제헌의회가 소집돼야 한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소집하려면 현행 헌법에 제헌의회 소집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를 참조하자!
- ▲ 새 헌법에는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 수술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변혁과제들이 포함돼야 하고, 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민중권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자유와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중간평가제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열. 노동자·민중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권력 쟁취

- ▲ 이런 민중헌법 하에서 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하고 민중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21세기형 진정한 민주주의이다.